

‘내각 첫 낙마’ 통일교 의혹…李대통령, 조기진화 가능할까

해수부 이전 등 역점사업 차질 빛나

내각 안정성에 미칠 여파 예의주시

“정공법…원칙 지켜야 불법 뿌리뽑아”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결국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앞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원칙을 앞세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여야 불문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다면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 대통령 지시의 취지가 일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예상 가능한 출혈’이었다고는 해도 실제로 정부가 입는 타격은 절대 가볍지 않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 등의 경우 현

장 지휘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아가 혹여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와 수사가 이어질 경우엔 전체 내각의 국정운영이 불안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전략에 대한 궤도 수정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 섞인 시선과는 별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정공법’이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장관도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잘못된 의혹에 대해 당연히 수사받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면서 “종교계단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덮고 지나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이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런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아야만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밑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애초 예상과 달리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권을 겨냥한 의혹 제기가 이제는 정리되는 국면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일 전 장관을 겨냥한 이번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경우 오히려 전 장관의 부산시장 (선거) 행보는 이전보다 더 탄력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 확인

‘편파수사’ 지적엔 강한 유감 표명

민중이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그가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

적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확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간 특검 측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에 관해 공식 석상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행배 ‘亞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행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1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종료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31일에서 2036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무현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

실제 이 사업의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 문재인 정부 당시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30%에 불과해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행배 의원은 “사업 유효기간 종료가 눈앞인 만큼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나경원 방지법)도 대표 발의했다.

/김진수기자

정진욱 “GGM 2교대 전환 일자리 1천개 늘려야”

현장 최고위서 정청래 대표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1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근무체계를 현행 단일 교대 체제에서 2교대 방식으로 전환하면 광주의 청년 일자리 1천개를 신규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에게 ‘GGM 2교대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대자동차를 설득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GGM은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이자 지역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제조업 현장”이라며 “현재의 단일 교대 체제로는 폭증하는 생산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2교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광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GGM은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 27명

모집에 992명이 지원(경쟁률 36.7대1)하는 등 광주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오전 7시30분~오후 4시30분의 현행 단일 교대 체제가 유지되면서 생산량 확대가 불가능해 신규 채용 규모 또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GGM이 생산 중인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는 국내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며 출고 대기 기간만 1년 이상이고 이로 인한 중고차 가격 또한 신차 가격을 웃도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장 증산은 사실상 멈춰 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은 2교대 전환 시 GGM 및 협력사 포함 최소 1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GGM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사다리가 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 회복과 함께 현대자동차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광주시와 노조, 기업이 함께 상생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